

# EU Brief

| EU 동향 |

- 그리스와 유럽 통합의 미래  
Future of Greece and European Integration
- 유로존의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리스크 요인  
Risk Factors of Eurozone's Economic Recovery
- 2015년 EU의 주요 총선 및 시사점  
Major General Elections in the EU in 2015
- 對유럽 M&A와 글로벌 역량 강화  
Europe Target M&A and Strengthening Global Competitiveness
- 러시아 경제위기가 유럽 기업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Russian Financial Crisis on European Companies



**YONSEI**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 ‘구글세’와 국제사회의 세금전쟁

## ‘Google Tax’ and International Tax War

Global companies such as Google, Amazon, Apple, Facebook, Starbucks are taking criticism because they are accused of avoiding taxes by moving profits from high to low-tax countries. This report explains how Google has been avoiding taxes and what kind of actions international society will take in response to tax avoidance.

영국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sup>1</sup>를 겨냥한 이른바 ‘구글세’를 2015년 4월경 도입할 예정이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다국적 기업이 영국 내 경제활동 수익을 나라 밖으로 인위적으로 옮길 경우 이 수익의 25%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러한 ‘수익우회세(Diverted Profits Tax)’를 일명 ‘구글세’라 부른다.<sup>2</sup>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식과 규모가 공개되면서 이 회사들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겨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은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국가 간의 세제가 다른 점을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한다면, 공평하고 실효적인 과세가 곤란해지며,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구글이 어떻게 조세를 회피해왔는지 살펴보면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EU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보고자 한다.

<sup>1</sup> 조세회피 자체는 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벌과금이나 형벌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없다. 다만 입법자가 의도한 통상적인 행위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는 사업자가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통상적인 행위를 가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된다.(오윤 (2013). “국제적 조세회피의 현황과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sup>2</sup> ‘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겨냥 ‘구글세’ 도입.’ (2014. 12. 4). ‘한국일보’.

또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세계 최대가스 수출기업 가스프롬과 유럽 대형 은행들이 연이어 자금조달 계약을 맺기도 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단 두 달 사이에 이탈리아의 대형 은행들은 두 차례에 걸쳐 7억 4,000만 달러의 규모의 대출계약을 체결했다<sup>10</sup>.

따라서 당분간 러시아 경제의 침체로 인해 유럽 기업의 러시아 사업이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동시에 상황이 개선될 것을 대비하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유럽 기업들의 물밑 각축전도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금지하거나 계좌송금 지불만 허용하기로 했다. 덴마크 단열재 회사 락울(Rockwool)은 당분간 수입자재 조달을 중단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자금유출 빈도를 늘리기로 결정했으며, 러시아에 7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핀란드 유통업체 스톡만(Stockmann) 역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 러시아를 포기할 수 없는 유럽

그러나 아무리 러시아 시장이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유럽 기업들이 세계 최대의 자원부국이자 1억 4,000만 명의 소비시장인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기는 힘들다.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유제품 업체 발리오(Valio)는 2015년 러시아 내 치즈 생산량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회사의 총 수출량 중 49%가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러시아에서 총 3억 7,8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역시 2014년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한편, 이번 위기로 인해 러시아 시장에서의 매출이 늘어나 시가총액이 증가한 기업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러시아 시장에서의 사업 비중이 10% 이상인 29개 외국기업 중 터키 기업 3개 사의 시가총액이 증가했다. 터키의 유리 제조업체인 SCF(Sise & Cam Fabrikalari)는 30%, 제철기업인 에브라즈(Evraz)와 건설기업인 텍펜 홀딩(Tekfen Holding)은 9%씩 증가했다. 게다가 러시아 부유층이 화폐 가치 절하를 보충하기 위해 사치품과 부동산 구입에 열을 올리면서 롤스로이스(Rolls-Royce)와 같은 유럽의 고급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2014년 11월 포르쉐 판매량은 전년 대비 55%나 증가했다.

한편, 유럽은 제재 와중에도 은밀하게 러시아 기업에 대해 유화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014년 12월 4일 EU는 제재안을 일부 완화했다<sup>9</sup>. 그 내용은 러시아 5대 주요 은행(스베르뱅크, VTB, 가스프롬뱅크, VEB, 로셀호즈뱅크) 등에 유럽 지점이 지불불능 위험에 처할 경우에 한해서 장기 자금조달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sup>9</sup> COUNCIL REGULATION (EU) No 1290/2014 of 4 December 2014

<sup>10</sup> 2014년 12월 유니크레디트와 3억 9,000만 달러, 2015년 1월 산 파올로 SpA와 3억 5,0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

###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강화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수 감소, 재정 수요 증가, 저성장 지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회원국 정부는 세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왔다. 그리스로부터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EU 회원국들은 탈세나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기회복은 물론 조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조세투명성 강화에 대한 EU의 일관된 입장은 2012년 12월 EU 집행위의 ‘탈세 및 조세회피에 관한 실행계획(Action Plan to Strengthen the Fight against Tax Fraud and Tax Evasion)’ 발표, 2013년 5월의 EU 정상회의, 6월의 G8 정상회담, 그리고 9월의 G20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 애플 등의 다국적 기업이 공격적인 절세 기법을 동원하여 수익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EU 회원국들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더욱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

한편, 경기침체 장기화로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EU의 각국 회원국은 조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였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하향 추세에 있던 EU 회원국들의 소득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EU 역내 및 역외에서 탈세와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일례로 소득세율은 전적으로 EU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국가 간 편차가 크며 결과적으로 회원국 간 세율 차이에 따른 탈세 및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sup>3</sup> EU의 각국 회원국은 당초 세수 확보를 위해 부유층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방안은 사회적 혼란만 초래한 채 구체적인 성과 달성에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4</sup> EU 역내를 기준으로 약 1조 9,000억 유로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상이하거나 해당 지역의 사정으로 인해 지하경제를 단기간에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sup>5</sup>

이와 같이 부유세 도입 방안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원 확보 방안이 실행 단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자 EU 회원국들은 최근 불법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조세 피난처의 정보를 공개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과도한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했다. EU는 다국적 기업들의 역외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한편,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은행 비밀주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예외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은행 비밀주의에 대한 정보 공유 요청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

최근 구글과 스타벅스,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에서 거둔 엄청난 수익을 세금이 낮은 지역의 법인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sup>6</sup> 예를 들어, 구글과 애플은 지식재산권 거래를

통한 수익 대부분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하였다.<sup>7</sup> 조세회피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글세 탄생의 배경이 된 구글의 조세회피 전략을 먼저 살펴보고, 아마존이나 스타벅스의 조세회피 전략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sup>8</sup>

구글은 광고 검색 등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특허권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에 이전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는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는 조세회피 기법으로, 아일랜드 회사 두 곳(Double Irish)과 네덜란드 회사 한 곳(a Dutch)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세회피 방식으로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 파운드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법인세로 단지 600만 파운드만을 납부했다. 우선 아일랜드 법인을 설립하되 이 회사의 관리를 조세피난처인 버뮤다에 설립된 회사가 담당하도록 한 후 아일랜드 법인에 다국적 기업의 수입,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수익을 송금한다.<sup>9</sup> 그리고 나서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 아일랜드 법인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각각 설립한다(편의상 아일랜드 자회사와 네덜란드 자회사라 한다). 아일랜드 법인은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아일랜드 자회사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법인세율이 낮은 네덜란드 자회사를 거쳐 다시 역방향으로 로열티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아일랜드 법인은 버뮤다 법인으로 취급되고 버뮤다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조세피난처이므로 구글은 로열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아일랜드 법인에 소득을 장기간

유보해놓을 수 있다. 결국 구글의 아일랜드 법인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이러한 수익금에 대해 아일랜드나 조세피난처 제공 국가 어느 곳에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sup>10</sup>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로 불리는 구글의 이러한 절세 기법은 원래 애플이 최초로 고안한 것으로, 현재 수백 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존과 스타벅스는 의도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였다. 영국 스타벅스는 네덜란드의 유럽 본부에 로열티를, 스위스의 계열사에 커피 구매료를 지급하여 의도적으로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3년간 영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스타벅스는 14년간 영국에서의 매출액이 31억 파운드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납부한 법인세는 860만 파운드에 불과했다. 아마존은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매출을 극대화하면서도 수익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아마존의 매출은 2012년에 전년 대비 40%나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3,9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아마존은 이미 2007년 영국 내 사업 부문을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이전하여 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글, 애플, 아마존, 스타벅스 등과 같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절세 기법을 활용하여 매출액의 0.1% 내외 정도만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이와 같은 조세회피 사례가 알려지자 다국적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Fair Share of Tax)'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구글의 조세회피 전략에 기반을 제공해 주었던 아일랜드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아일랜드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013년 5월 21일 미국 상임조사위원회가 애플 또한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방식으로 2009~2012년 동안 순이익 770억 달러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표하였음에도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에 특별한 세금혜택을 준 적이 없으며, 이런 세금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조약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sup>11</sup>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빌미를 제공해주었다는 국제적 비난이 가중되자 아일랜드는 2013년 10월 16일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역외 탈세방지법안을 발표했다.<sup>12</sup>

OECD는 2012년 6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과 관련된 종합행동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ction Plan) 추진을 결정하였다.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OECD 및 G20 차원의 국제 조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OECD는 2014년에 작성한 보고서 중 7개를 2015년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sup>13</sup>

한편, EU집행위는 2012년 12월 탈세 및 조세회피에 관한 실행계획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고, EU 정상들은 2013년 5월 EU 정상회의에서 금융정보 공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sup>14</sup>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조세회피 지역과 기준에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폐기해 지나치게 적은 세금을 낸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납세자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2013년 6월의 G8 정상회담, 그리고 9월의 G20 정상회의에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공조방안을

3 개인소득세율의 경우 2013년 기준, 스웨덴이 56.6%로 가장 높은 반면, 불가리아는 10.0%로 가장 낮아 46.6%p의 세율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법인세율은 프랑스가 36.1%로 가장 높은 반면, 불가리아와 키프로스는 10.0%에 불과해 26.1%p의 세율 차이가 발생했다.(오태현 (2013. 6. 14). "조세회피 관련 최근 EU 대응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프랑스 정부가 소득세율을 75%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LVMH의 아르노 회장, 영화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등이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였으며, 동방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는 등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박성규 (2013. 6. 20). "G8 정상회담과 조세투명성 논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5 유럽 내에서도 동유럽(24.6%)과 남유럽(22.5%)의 지하경제 비중이 북유럽(13.7%)과 서유럽(11.1%)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에서 지하경제가 만연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개혁 이전의 부패 존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금거래의 보편화, 상호부조 등 지하경제 활동으로 저소득층의 실질 피해가 경감되는 현실 등이 제시되고 있다.(이종규 (2013. 2. 19). "유럽 지하경제 현황과 각국 정부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6 "EU, 다국적기업·조세회피처 부담 세금거래 의혹 조사". (2013. 9. 12). 『서울경제』.

7 1990년대 후반 생산시설이 폐쇄된 후 애플의 아일랜드 법인이 서류상의 지주회사로만 존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특허권 사용료 등 지식재산권 수익을 자사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전하여 1,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이 법인에 비축하였다. 각국 세법의 맹점을 활용하여 애플의 아일랜드 법인은 5년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애플은 해외에서 거둔 수익 740억 달러 중 2%만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오태현 (2013. 6. 14). "조세회피 관련 최근 EU 대응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성규 (2013. 6. 20). "G8 정상회담과 조세투명성 논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8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세회피방식으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조약편승을 통한 조세회피, 이전가격조정을 통한 조세회피 등이 있다.

9 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는 미국 세법상 아일랜드 소재회사로 취급된다. 그러나 아일랜드 세법에서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본사 소재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 아일랜드에서는 버뮤다 법인으로 취급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10 안은혜 (2014). "구글 사례로 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대응방안". 『이화 Law Review』, 4(2), 33-34.

11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12.5%인데, 이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안은혜 (2014). "구글 사례로 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대응방안". 『이화 Law Review』, 4(2), 33-34.)

12 이 법안에는 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들에 대해 2015년부터 세법상 거주지(Tax Residency)를 특정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통상 법인세율(12.5%)을 적용한다는 계획 등이 담겨 있다.(안은혜 (2014). "구글 사례로 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대응방안". 『이화 Law Review』, 4(2), 33-34.)

13 기획재정부 (2014. 11. 18).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른 정부 대응 방향."

14 오태현 (2013. 6. 14). "조세회피 관련 최근 EU 대응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슬람에 대한 유럽인의 시각

## European Perspective on Islam

The terrorist attack on Charlie Hebdo, a satirical French magazine, shocked the world earlier this year. Still,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eligious opinion continues to cause conflicts and disputes. Most people agree that this act of terrorism was a barbaric attack. After the incident, most of the press denounced the attack and compared it to the September 11 attacks. However, as time passes, people have begun to rebuke Charlie Hebdo and some European leaders who have ridiculed the leaders of other religions.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speech that does not respect religious and cultural diversity is a growing argument in Europe that requires self-examination.

프랑스의 시사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신년 초부터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입장이 상충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테러는 자신과 견해가 다른 집단에 대한 폭력적 만행이라는 점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직후 9·11 테러에 비유하며 극악무도한 이슬람 테러집단을 비난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표현의 자유와 관용의 정신을 내세우며 타 종교의 지도자를 조롱한 『샤를리 에브도』와 일부 유럽인들의 시선이 질타를 받고 있다. 종교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해야 하는지가 논쟁거리가 된 것이다. 유럽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자회견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타인의 종교를 모독하거나 조롱하면 안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파리에 거주하는 평범한 이슬람 학생들이 테러 이후에도 계속되는 『샤를리 에브도』의 무함마드 만평에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타 종교 지도자를 조롱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은 왜곡과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의견도 존중

표현의 자유를 처음 공식적으로 주장한 유럽의 정치 철학자들은 당시 지배계급에 대한 소수의 저항의 목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쳤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그의 저서 『신학의 정치학』에서 당대 네덜란드 지배계급이었던 칼뱅파 교권주의자들을 향해 소수의 신념과 의견을 탄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정부’야말로 가장 억압적인 정부라고 선언하고 사상과 견해를 공표할 자유를 요구했다.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는 지배적 주류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을 의미한다. 이는 『샤를리 에브도』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샤를리 에브도』는 타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이 자신의 신념을 타 집단에 강요했고, 타 종교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조롱함으로써 참혹한 결과를 맞았다. 자신의 신념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당한 소수의 저항은 집요했다. “나는 『샤를리 에브도』가 아니다 (Je ne suis pas Charlie Hebdo)”라는 구호로 만들어진 페이스북 페이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들로 채워졌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 유럽 국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상이하게 정의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예컨대,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반유대주의 문화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대상으로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반이슬람주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조차 없다. 특정 종교에 차별적인 표현의 자유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범은 알제리 이민자의 후손이자 프랑스 시민이었다. 그들 소외 집단의 사회적 배제가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공격적 절세 기법에 대한 비난 여론에 힘입어 각국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국제 거래와 관련된 조세법적 의무 이행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는 기업 평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영국에서의 조세회피가 알려진 후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어 결국 자발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아마존과 구글도 관련 국가들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복지예산 증가로 인해 재정악화 상황에 처해 있는 정부가 역외탈세, 고액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등의 지능적인 탈세·탈루 사범을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분야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기업들의 다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합법적인 절세 행위를 할 때에도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백대용 법무법인세종 변호사

마련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노력의 일환으로 조세정의 구현 과제를 설정했는데, ① 국가별 세금정보의 자동교환, ② 조세회피 목적의 수익 이전 행위 차단을 위한 세제 보완, ③ 기업의 소유 및 수익 구조에 관한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다.

이 외에도 각국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sup>15</sup> 독일 정부는 스위스 정부와 「은행 계좌정보 제공협정」을 맺고 스위스에 은닉된 독일인 재산에 대하여 과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 탈세 방지를 위한 은행 계좌정보 상호교환에 합의하였다. 영국은 2011년 12월 스위스와 「역외탈세방지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국제세의 조세회피 추적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회피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금지하였다. 미국은 실제로 2009년 스위스의 UBS 은행을 상대로 미국인 고객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UBS는 4천여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7억 8,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인 보유 계좌 정보를 미국 국제청에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해외 금융기관 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을 도입하였으며, 외국 금융기관이 정보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계좌신고제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미국에서 얻는 금융 수익의 30%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 간 금융거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은행 비밀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들에 국제적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EU 회원국들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공조가 필요하므로, EU 회원국 간뿐 아니라 역외 국가들과의 국제공조도 확대될

<sup>15</sup> 각국의 조세회피방지 대응방안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박성규 (2013. 6. 20). “G8 정상회담과 조세투명성 논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10면에서 인용